

통일 전후 독일 금융 기관의 역할과 한반도 통일금융에 대한 시사점

〈목 차〉

- I. 통일 이전 동서독 경제협력과 금융 지원 방식
- II. 통일 이후 동서독 경제통합과 금융 기관의 역할
- III. 한반도 남북경협 동향과 금융지원 방식
- IV. 남북협력기금과 통일금융의 필요성

I 통일 이전 동서독 경제협력과 금융지원 방식

▶ 통일 이전 동서독 경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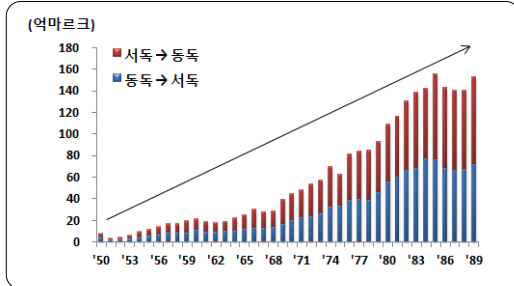
- 서독은 동독과의 경협 확대를 통하여 시장경제체제를 전파하고, 동독 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통합 기반 마련
 - 동서독 간 상품교역은 금융지원을 토대로 40년간 20배 이상 증가
 - 상품교역액 : '50년 7.4억 DM → '89년 153.1억 DM
 - 동독은 공업용 원자재와 소비재를, 서독은 생산재와 투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형태(Complementary Trade)
 - 동독 → 서독('89년) : 원자재 35억 DM, 소비재 17억 DM 등
 - 서독 → 동독('89년) : 자본재 31억 DM, 원자재 30억 DM 등
- 서독의 대동독 투자를 매개로 한 경협사업¹⁾은 동독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인프라 구축에 기여
 - 서독은 동독에 기계설비와 함께 생산기술을 제공

* 본고는 한용덕 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1) 동독기업이 서독기업에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시행하거나, 생산특허를 서독으로부터 도입하여 동독 지역에서 생산하는 형태, 서독이 동독지역에 직접투자하여 공동생산하거나 제3국과의 합작투자 등 다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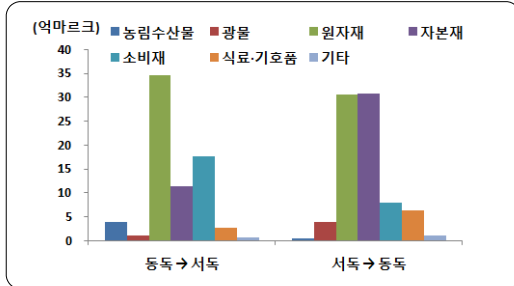
통일 전후 독일 금융 기관의 역할과 한반도 통일금융에 대한 시사점

동서독 간 상품교역 추이



자료 : 독일 통계청

동서독 간 품목별 교역 현황



주 : '89년 기준
자료 : 독일 통계청

- 서독은 동서독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금융부문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
 - 청산계정²⁾ 대월제도 시행, 상업차관 공급 및 연불수출금융 제공 등 경험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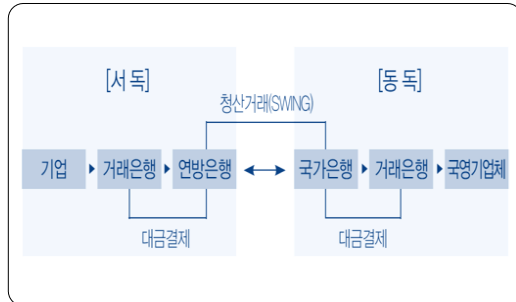
▶ 금융지원 방식

1. 청산계정 대월제도

- 독일은 청산계정 대월제도 시행으로 동서독 간 경제교류에 일정 한도의 신용 거래를 허용
 - 당시 동서독 간 재화·용역 거래에 따르는 대금결제는 동독과 서독의 중앙은행 간의 청산계정을 통해 결제하는 시스템
 - 일정기간 누적 대차잔액을 청산하는 차액 정산방식 적용
 - 동독의 지속적인 對서독 교역적자를 대월제도로 지원
 - 대월한도액 : '55년 1억 DM → '80년 8.5억 DM
 - 대월한도 소진율 : '55년 52% → '80년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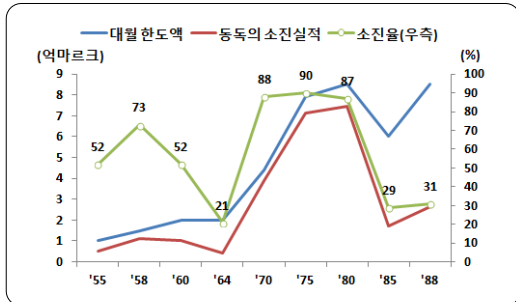
2) 수출입 거래 시 거래마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누적 대차잔액만을 청산하는 제도. 남북한은 남북경협 청산계정 제도 도입을 '04년에 합의하였으나 청산결제의 대상 품목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동서독 청산거래 시스템 구조



자료 : 조봉현(2014),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금융의 역할과 시사점”

청산계정 대월한도와 동독의 소진실적



자료 : 독일경제사회통합연구 단기조사단(1990), “독일 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

2. 중장기 연불수출금융³⁾

- 서독 정부는 산업금융회사(GEFI)⁴⁾를 설립하여 동독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연불수출금융 지원
 - 연불수출금융은 동독 기업이 서독 기업에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기 시작한 '70년 이후 활성화
 - 연불수출금융 지원에 필요한 지급보증을 위해 대외무역 대출 및 융자보험 회사인 Treuarbeit AG⁵⁾ 설립

3. 서독 은행단의 對동독 상업차관

- 같은 기간('90~'98년)동안 서독 정부의 보증 하에 동독에 약 20억 DM의 상업차관을 우대조건으로 제공
 - '82년 외화부족을 겪은 동독이 서독에 40억 마르크 차관 요청
 - 당시 동독의 대서방 외채는 90~130억 달러인데, 이 중 40% 이상이 단기외채

3) 산업설비, 선박 등 제작기간이 긴 고가의 제품 수출에 따른 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입 금융기관이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융

4) 서독의 중장기 연불수출금융기관인 AKA의 자회사로 독일은행이 주도하는 서독의 54개 민간은행 컨소시엄으로 설립

5) 1967년 설립, 대외무역 관련 대출 및 융자보험 회사로 對동독 자본재 수출에 대한 보험인수 업무 담당

통일 전후 독일 금융 기관의 역할과 한반도 통일금융에 대한 시사점

- 서독 은행단은 차관 공급을 통해 동독의 대외채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동서독 간 경제의존도를 심화시킴
- '83년 10억 DM, '84년 9.5억 DM을 동독대외무역은행(DAB) 앞 공급

서독의 대동독 상업차관 제공내역

(단위 : 억DM)

| | 차관 제공 은행 | 차관액 |
|---------|---|-----|
| '83. 7월 | <간사은행> - Landesbank 룩셈부르크 현지법인 <참여은행> - 6개 서독은행의 외국 현지법인 | 5 |
| | <간사은행> - Deutsche Bank 룩셈부르크 현지법인 <참여은행> - 17개 서독은행의 외국 현지법인 | 5 |
| '84. 7월 | <간사은행> - Deutsche Bank 룩셈부르크 현지법인 <참여은행> - 25개 서독은행의 외국 현지법인 | 9.5 |

주 : 차주은행은 동독의 대외무역은행(DAB), 금리는 Libor + 100bp였음
 자료 : 박유환(1997), 북한의 금융제도와 남북한 금융협력 방안

II 통일 이후 동서독 경제통합과 금융기관의 역할

▶ 중앙은행(독일연방은행)

1. 화폐통합 실시

- 화폐통합 이후 동독 금융기관이 상업은행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동독 마르크 M 표시 대차대조표를 서독 DM 단위로 전환
- 화폐통합 당시 동독 주민의 금융자산 가치를 보전해주기 위해 개인 예치금을 상대적으로 고평가
 -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대외채권 등 자산 평균 교환비율은 2.03(M):1(DM), 예수금 등 부채는 1.81(M):1(DM)
 - 그 결과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상 부채가 자산을 약 264억 DM 가량 상회
- 이에 독일 연방정부는 화폐 교환 차액보전기금을 설치하여, 일반은행들이 화폐교환으로 입은 손해를 보전
 - 이와 반대로 화폐교환을 통해 수익을 올린 금융기관들은 해당 수익금을 차액보전기금에 반납

동독 금융기관에 대한 통화교환비율

(단위 : M, DM)

| 자 산 | | 교환비율 | 부 채 | | 교환비율 |
|----------|----------|--------|------|------|--------|
| 비은행 대출 | | 2.2:1 | 정부 | | 2:1 |
| 대외 채권 | 구 동구권 국가 | 2:1 | 기업 | | 2.05:1 |
| | 서유럽 국가 | 1:1 | 민간 | 내국인 | 1.44:1 |
| 금융투자 | | 1:1 | | 외국인 | 2.05:1 |
| 기타자산 | | 2:1 | | 생명보험 | 2:1 |
| - | | | 기타부채 | | 2:1 |
| 평균 | | 2.03:1 | 평균 | | 1.81:1 |

주 : M은 동독 마르크 DM은 서독 도이치마르크
 자료 : Deutsche Bundesbank(1990), Monthly Report

2. 화폐통합 부작용 최소화 노력

- 동·서독 화폐통합이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사회적 논리로 추진된 결과, 통화공급 과잉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상존
 - '90년 7월 화폐통합에 따라 통화량 M3가 직전 대비 15%(1,801억 DM) 증가⁶⁾
 - 독일연방은행이 추정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적정 통화량 증가율 10%(1,200억 DM)보다 상회
- 충유동성(M3)을 관리목표로 하는 기존 통화정책을 통일 후에도 고수하며 거시경제 안정 도모
 - 2%의 인플레이션율 달성을 위해 통화량증가율 목표치를 4-6%로 설정하였으나 목표달성에 어려움 겪음
 - 민간 화폐수요 불안정, M3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금융상품인 MMF도입 등에 기인
 - '91~'92년 재할인율 등을 인상하여 동독 주민의 현금을 유동성이 낮은 장기 금융상품으로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 교란 최소화⁷⁾

통일 이후 통화량(M3) 및 금리 추이

(단위 : %)

| |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
| 통화량 증가율 | 목표 | 4.0~6.0 | 3.0~5.0 | 3.5~5.5 | 4.5~6.5 | 4.0~6.0 | 4.0~6.0 | 4.0~7.0 |
| | 실제 | 5.6 | 5.2 | 9.4 | 7.5 | 5.7 | 2.1 | 8.1 |
| 금리 | 단기 | 8.4 | 9.2 | 9.5 | 7.2 | 5.3 | 4.5 | 3.3 |
| | 장기 | 8.9 | 8.7 | 8.1 | 6.4 | 6.7 | 6.5 | 5.6 |

자료 :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1998)

6) 한국은행(1998), “독일의 경제통합정책”, p.39

7) 금리인상에 따른 통화가치 절상, 기업 조달비용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약화 및 대량실업 문제가 심화

▶ 정책금융기관(독일재건은행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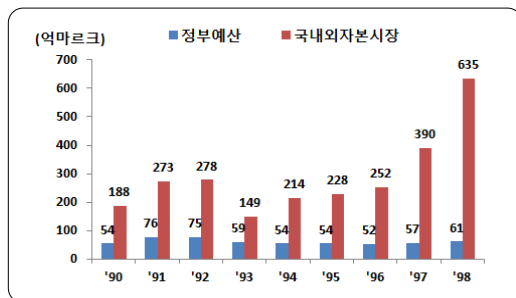
1. 동독지역 개발을 위한 자원조달

- 동독지역 개발을 위하여 '90년부터 '98년까지 총 3,149억 DM 조달
 - 자본시장에서의 채권발행 및 정부 예산지원을 통해 자금 조달
 - 통일 후 독일재건은행의 적극적인 외자조달로 국외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조달 비중 점차 증가
 - 국내 자본시장 55%, 국외 자본시장 28%, 정부예산 17%

2.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금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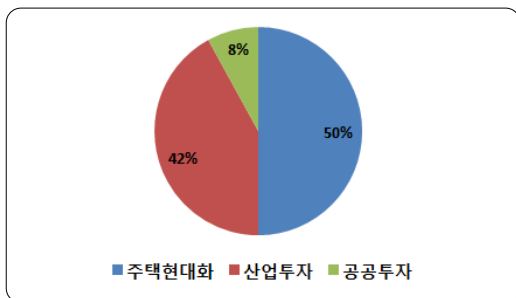
- '90년부터 '98년까지 주택 현대화(50%), 산업투자(42%), 공공투자 (16%)에 총 1,364억 DM의 대출지원⁹⁾
 - 주택현대화 부문에 676억 DM을 공급하여, 동독 주택의 40%인 330만채 아파트 현대화 및 10만채 아파트 신축
 - 산업투자 부문에 571억 DM을 공급하여, 68,000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250만명 고용 창출
 - 공공투자 부문에 117억 DM을 공급하여, 하수처리와 정수처리 시설 등 약 5천건의 인프라 확충

독일재건은행의 자금조달 내역



자료 : KfW Annual Report

독일재건은행의 업무 비중



자료 : KfW Annual Report

8) 독일의 대표 정책금융기관 : 제2차 대전으로 황폐화된 서독의 산업시설과 경제 재건을 위해 설비자금 공급 및 마샬 원조자금 관리 목적으로 1948년에 설립되었으며 연방정부 80%, 주정부 20% 지분 소유

9) 김명식(2001), “통독과정 중 독일재건은행의 역할 : 남북통일과정상의 시사점”, pp81~82

통일 전후 독일 금융 기관의 역할과 한반도 통일금융에 대한 시사점

- 통일 후 석탄과 전력부문, 기초재, 건설부문 등의 자금지원 비중 증가
 - (석탄과 전력부문) 동독지역 산업설비 증가에 따른 전력생산 증대 목적의 지원 증가
 - 석탄·전력 대출금 구성비 : '90년 0.8% → '98년 3.3%
 - (기초재·건설부문) 동독지역의 주택, 공장 건설 증가와 관련 기초재인 비금속 광물, 철강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 증가
 - 기초재 대출금 구성비 : '90년 6.7% → '98년 14.3%
 - (기타) 공공기관이나 가계부문의 자금지원이 급격하게 증가
 - 기타 대출금 구성비 : '90년 14.4% → '98년 20.9%

KfW의 업종별 대출금 구성비 추이

(단위 : %, 억DM)

|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
| 농업 | 0.6 | 0.4 | 0.4 | 0.3 | 0.3 | 0.4 | 0.4 | 0.5 | 0.5 |
| 석탄·전력 | 0.8 | 1.9 | 4.8 | 2.3 | 2.0 | 3.3 | 2.8 | 3.8 | 3.3 |
| 기초재 | 6.7 | 10.5 | 8.2 | 10.0 | 7.2 | 7.4 | 6.2 | 14.7 | 14.3 |
| 자본재 | 10.0 | 10.8 | 8.8 | 9.0 | 9.0 | 11.3 | 9.6 | 4.9 | 5.2 |
| 소비재 | 8.3 | 9.5 | 7.3 | 7.9 | 7.0 | 6.7 | 6.0 | 0.8 | 0.8 |
| 음식료·담배 | 4.4 | 6.4 | 4.8 | 4.0 | 3.8 | 3.4 | 3.0 | 3.6 | 3.3 |
| 건설 | 3.9 | 3.9 | 4.3 | 5.2 | 4.0 | 3.4 | 3.5 | 2.9 | 2.2 |
| 서비스 | 50.9 | 37.3 | 38.6 | 37.7 | 48.9 | 50.3 | 51.9 | 55.9 | 49.5 |
| 기타 | 14.4 | 19.3 | 22.8 | 23.6 | 17.8 | 13.8 | 16.6 | 12.9 | 20.9 |
| 금액 | 202 | 319 | 289 | 210 | 303 | 269 | 330 | 410 | 480 |

자료 : KfW Annual Report

- (인프라확충) '94년에 공공부문 자금수요 지원 전담은행인 베를린 국립은행 (Staatsbank Berlin)을 인수, 인프라 구축 지원
 - 설립 이후 최초로 동독지역에 점포망을 갖추게 되어, 동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
- (투자촉진) '91년 연방정부에 의한 보조금, 수당, 특별상각과 같은 금융지원 제도의 창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투자 촉진

3. 보증기관 설립지원

- (지원배경) 동독 지역 내 중소기업들은 투자할 자금과 담보가 부족한 상황으로, 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필요성 대두
- 동독지역 중소기업의 담보부족 해소를 위해 '90년 말까지 동독지역에 주별로 5개의 보증기관 설립 지원
 - 신용보증기관에 1.3억 DM의 ERP기금 대출 지원
 - 연 1%, 15년 거치 포함 25년 상환의 우대조건으로 제공

4. 가계부채 처리 지원

- 동독 가계부문의 부분적 구제를 위하여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동독 가계부채의 53%(285억 DM)에 이르는 자금을 대환
- 연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화폐통합으로 발생한 구 지방자치단체 대출관리 특수대리 업무 수행
 - 비거주자 계좌, 과거 동서독 간 지불거래, 화폐통합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요구, 舊소련 점령 시기에 미해결된 비거주자 부채 문제의 해결 등
 - 64억 DM의 비거주자 부채 중 48억 DM을 해결, '72년 국가어음대출 상환에서 제외되었던 동독 이외 거주자들에게도 상환 실시

5. 기타

- 경영자문 및 회계시스템 재구축 지원
 - 동독기업에 경영, 판매, 인사관리 등 다방면에 걸친 경영자문
 - 동독국립은행 회계시스템 재구축 지원

- 국유기업 사유화 업무 지원
 - 신탁청(Treuhandanstalt) 본점 및 7개 지점에 직원 파견
 - 기업의 계획사업 평가와 대차대조표 분석 등 기업의 신속한 사유화를 위한 기반 구축 지원
 - '90년 3월 베를린에 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신탁청 소유 기업 매매와 관련된 정보제공과 자문 역할 수행

▶ 주요 상업은행 : 금융 인프라 구축에 기여

- 통일 전 동독의 금융 시스템은 여신을 동독국립은행 등 공공은행이 담당하고, 수신을 저축은행이 담당하는 구조
 - 동독국립은행, 대외무역은행 및 농업은행이 동독지역 총 여신의 92.9% 점유
 - 동독지역 전체에 광범위한 지점망을 가진 저축은행은 동독지역 총 수신의 81.2%를 점유

동독의 금융기관 현황

(단위 : 개, %)

| 구분 | 금융기관수 | 지점수 | 수신 점유율 | 여신 점유율 |
|----------|-------|----------|--------|--------|
| 공공은행 | 3 | 539 | 8.4 | 92.9 |
| (독일국립은행) | (1) | (338) | (0.0) | (80.0) |
| (대외무역은행) | (1) | (26) | (0.0) | (5.0) |
| (농업은행) | (1) | (175) | (8.4) | (7.9) |
| 신용협동조합 | 371 | 2,559 | 6.9 | 3.1 |
| 저축은행 | 196 | 3,296 | 81.2 | 4.0 |
| 우편은행 | 1 | 약 12,000 | 3.5 | 0.0 |

주 : '89년 기준

자료 : 국민은행경제연구소(1995), "국민은행의 북한지역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 통일 후 서독 상업은행은 영업영역 확보 목적으로 동독지역에 진출하여 금융 인프라 구축에 기여
 - 3대 상업은행의 경우 '92년까지 동독 내 지점망은 도이치은행 250개, 드레스드너은행 216개, 코메르츠 은행은 50개로 급증
 - 도이치은행은 동독 국유은행인 독일신용은행(DKB)을 흡수, 100여개의 지점망을 인수

對동독 상업은행 진출 현황

(단위 : 개, 만명)

| | 지점 설치수 | 고용 인원 | 고객 |
|----------|--------|-------|-----|
| 도이치 은행 | 250 | 1.1 | 75 |
| 드레스드너 은행 | 216 | 0.76 | 130 |

주 : '91.10월말 기준

자료 : 박상봉(1999), “독일 통일의 주역들Ⅵ : 금융인, 금융기관 : 연방은행(Bundesbank)

III

한반도 남북경협 동향과 금융지원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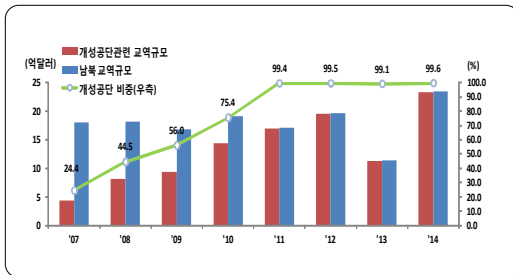
▶ 남북 교역 및 협력사업 동향

- 남북 교역액은 '14년 23.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이 대부분(99.8%)을 차지하고 있음
 - 남북 교역이 북한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년 47.4% 이후 계속 하락하여 '14년말 기준 23.5%에 불과
 - '14년 북한 전체 무역액 99.5억(수출 43.0억, 수입 56.5억) 달러
 - '14년 남북 교역액 23.4억(반출 11.4억, 반입 12.0억) 달러
- 남북 협력사업은 '14년 개성공단 5건 외에 최근 승인 건수 전무
 - 기존 경협사업 역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 절차 미비 등의 원인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 남북 협력사업 승인 건수 : '07년 188건 → '14년 5건

통일 전후 독일 금융 기관의 역할과 한반도 통일금융에 대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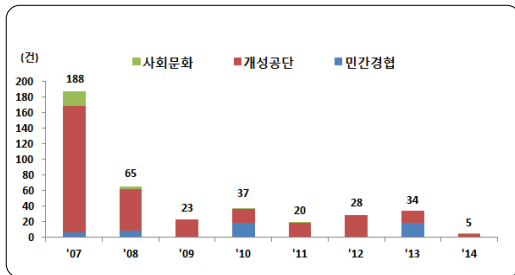
- '13년 북한은 경제개발구 선정,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등 대외개방에 나서고 있으나, 핵문제 등으로 현재의 경제 제재 국면 전환에는 역부족
 - 다만 중국의 AIIB 설립 추진으로 거대한 인프라 개발 수요를 보유한 동북아 지역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남북 교역 동향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남북 협력사업 승인 현황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 금융지원 방식

-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주로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집중되어 있음
 - 정부는 일반대출, 긴급운전자금 특별대출, 특례보증 등을 통해 지원
 - 기금 대출 1,350억원, 중기청 대출 672억원, 신·기보 보증 540억원

정부의 개성공단 금융지원 실적

(단위 : 개, 억원)

| 구분 | 남북협력기금 | | 중기청 | 신·기보특례보증 |
|------|--------|------|-----|----------|
|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 |
| 기업 수 | 28 | 114 | 105 | 54 |
| 금액 | 760 | 590 | 672 | 540 |

자료 : 통일부(2015), 남북협력백서

- 일반 금융기관은 남북경협사업 관련 금융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 진출 기업을 지원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10년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신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음

산은의 남북경협 금융지원 실적

| 사례 | 내용 | 기간 |
|--------------------|--|-----------------------|
| 개성공단 진출 기업 지원 | - 공장건설, 원재료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공급 • 총승인액 : 332억원, 업체수 : 13개(로만손 외) | '05.11 ~ '09.11 |
| 평양 진출 기업 지원 | - 남북 합영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공급 • 南 (주)안동대마방직과 北 새별총회사 공동투자 * 시설자금 15억원 승인 및 기표 | '05.09 ~ '09.06 |
| 정촌 흑연광산 프로젝트 지원 검토 | - 남북 합작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공급 검토 • 南 한국자원공사와 北 명지총회사 합작투자 * 현장실사 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검토 중단 | '06.03 |

IV 남북협력기금과 통일금융의 필요성

▶ 남북협력기금¹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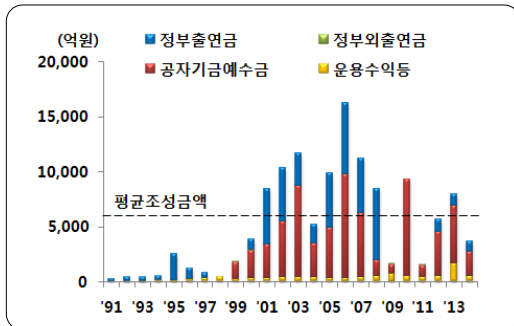
- 남북협력기금은 '14년에 3,693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14년말 기준 순자산액은 1조 2,945억원임
 -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정부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조성되고 있어, 사실상 정부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향후 북한 인프라 개발 등 남북 경협 확대를 감안하면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한 상황
 - 기금 조성 금액 : '91년 252억원 → '14년 3,693억원

10)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에 의거, '91년 통일부에 설치한 기금으로 현재 수출입은행이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 중

통일 전후 독일 금융 기관의 역할과 한반도 통일금융에 대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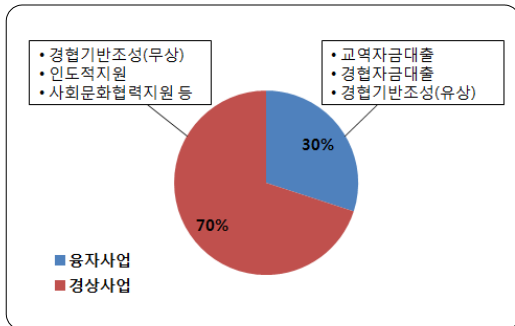
- 기금 집행은 남북교류 협력지원과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등의 경상사업과 교역·경협 자금대출을 위한 용자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 협력지원 및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등 경상사업에 70%, 용자사업 등에 30% 집행하였음
 - 문화·학술·체육협력 사업 지원, 경협기반조성 등 경상사업은 무상 지원으로 이루어짐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자료 :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 통계

남북협력기금 사업별 집행 비중



자료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지원현황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 '10 | '11 | '12 | '13 | '14 | 합 계 |
|------------------------|------------|------------|------------|--------------|------------|--------------|
| 경상사업(무상지원) | 410 | 297 | 473 | 2,211 | 653 | 4,044 |
| - 경협기반조성 ^{주)} | 177 | 167 | 421 | 2,037 | 441 | 3,243 |
| - 인도적지원 | 192 | 102 | 24 | 132 | 148 | 598 |
| - 사회문화협력지원 | 21 | 26 | 23 | 21 | 28 | 119 |
| - 이산가족지원 등 | 20 | 1 | 4 | 21 | 36 | 82 |
| 용자사업(대출) | 453 | 130 | 221 | 746 | 223 | 1,773 |
| 합 계 | 863 | 427 | 694 | 2,957 | 876 | 5,817 |

주 : 교역경협보험 집행내역 포함

자료 :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 통계

▶ 통일금융¹¹⁾의 필요성과 금융기관의 역할

- 향후 경험 자금 수요가 급증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만 의존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은 인도적 지원 및 경험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집중하고,
 - 금융기관(정책금융 + 민간금융)은 개발재원 조달역량 강화 및 수익성 있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추진이 필요
- 독일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남북한도 경험 확대를 경제격차를 최소화하고 북한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통합 기반을 구축해야 함
 - 그러나 정부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남북경협 확대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 독일도 동독 인프라 재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 재정이 아닌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충당하였음
-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 및 경제통합을 위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통일금융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정책금융기관(KfW)은 산업·인프라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단기간 내에 동독 경제 재건을 이루어냈음
 - 또한, 독일의 주요 상업은행은 舊동독지역 금융 인프라를 구축,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적재적소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통합에 밑거름이 됨
- 특히 정책금융기관은 원활한 통합을 위한 북한 지역 인프라 건설 및 산업 개발에 있어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발전소 개보수 또는 도로, 철도 개보수 등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수익성 있는 모델을 우선 발굴하여 대북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
 - 또한,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북한 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

11) 남북 경제협력력을 포함한 북한 경제 재건 및 한반도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운용하는 금융활동을 의미